

## ● 농축산소식

### 목장용지 종과세 소득세법 개정 시급

도시지역 자연녹지에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축산인들이 도시개발로 인해 목장을 이전할 경우 8.31 부동산조치 이후 양도종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진 소득세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31부동산조치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도시지역 자연녹지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지로 규정돼 양도할 경우 높은 세금을 내야 되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 나대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비사업용 토지는 세금감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법 104조에서 목장 용지는 비사업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단서조항에는 예외지역에서 사업용지로 농지만 명시돼 있고 목장용지는 정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아 일선세무서에서도 과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혼합분유 수입 전년 대비 69% 늘어

올 들어 혼합분유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우유소비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분유재고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이 발표한 축산물 수입검역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말까지 수입된 혼합분유는 모두 1만7천7백12톤으로 전년 동기 1만1천톤에 비해 69.3%가 늘어났다. 이런 수입량은 지난 2005년 같은 기간의 1만4천9백32톤에 비해서도 18.6% 증가한 것이다.

수입검역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14개

국가에서 혼합분유가 수입되고 있다.

이 중에서 5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물량을 수출한 국가는 네덜란드로 8천435톤을 기록했다. 네덜란드에서의 혼합분유 수입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0.1% 늘어난 것이다.

다른 국가들에서의 혼합분유 수입량이 전년보다 늘고 있는데 프랑스가 3천319톤으로 36.9%, 캐나다가 2천726톤으로 45.6%, 뉴질랜드가 1천343톤으로 28.5%씩 각각 증가했다.

한편 유가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국내산 분유 재고량은 1만1백10톤을 기록해 혼합분유 수입량 증가세가 국내산 분유재고 적체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노 대통령, 농축산대표와 간담회 개최

한미FTA 타결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캐나다, 덴마크 등 주요 경쟁상대국에 없는 도축세가 폐지된다. 또 식약청에만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권한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전북 김제에 있는 농산무역 방문한 데 이어 농업인단체장 및 농업CEO와 가진 간담회에서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의 도축세 폐지 건의를 받고, 지방세인 도축세 폐지를 하되 지자체의 세수 부족은 중앙정부에서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권을 농관원에도 함께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배석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도축세 폐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는 세수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난색을 표하자 노 대통령은 이번에는 중앙정부에서 보충해 주자고 말해 도축세 폐지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FTA 정책의 핵심은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육성하는 것인 만큼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가되, 경쟁대열에 새롭게 나설 수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지원이라든가 전업지원, 은퇴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보호·지원정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은 WTO가 농업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듯이 한미FTA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앞으로 있을 한중FTA에 미리 대비하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지원하겠다면서 농업정책만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며 다음에 어느 대통령이 들어와도 농업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사료곡물값 급등 대책마련 시급

사료곡물값 급등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6월 26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대전국제축산박람회와 관련해 열린 축산단체와 농협 축산경제 대표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날로 치솟는 사료곡물가격에 따른 사료업체 및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호 한국사료협회장은 "사료곡물가격이 30% 가까이 급등해 업체는 물론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사료원료 구입자금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저리지원해주고 정부와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캄보디아와 러시아 일대의 농장에 투자해 직

수입 채널을 만드는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도 "FTA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축산농가의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이같은 조치는 필요하다"며 추후 축산발전협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남경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 역시 사료업체의 부담이 축산농가 어려움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으며 관련대책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 미 수출작업장 수출선적 중단 해제

내수용 쇠고기 수출로 국내 수출선적이 잠정 중단됐던 미국 카킬 및 타이슨사 작업장 6곳의 수출선적 중단조치가 해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6월 26일 미국 농업부 리처드 레이몬드 차관이 두 차례의 서한을 통해 알려진 내수용 쇠고기의 한국 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우리측의 재발방지 대책요구에 대한 미국측의 조치가 수출 재개에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내 축산업계는 이에 대해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검역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며 정부의 저자세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미국 내 모든 수출작업장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검역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미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한 절사로 보여진다"며 "한·미FTA와 연계한 미국의 무리한 수출재개 시도는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농축산소식

###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흔들린다

농림부 축산국이 내년 축산발전기금 예산 수립과정에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를 하향 책정한 데다 이를 심의하고 있는 재정과에서 추가 삭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리 마리수가 2000년 27만6000마리에서 2005년 90만7000마리로 급증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100만 마리를 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수료는 마리당 1만원에서 2005년 8000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5000원으로 떨어져 조합 경영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부 축산국이 마리당 관리수수료를 4500원으로 낮추고, 재정부에서 다시 4000원으로 추가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서 축산발전협의회장단을 비롯한 한우개량사업협의회 조합장 8명은 지난 6월 20일 전국조합장들을 대신해 농림부 축산국을 방문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날 대표 조합장들은 2006년 말 현재 전국 축협들의 투입비용을 분석한 마리당 평균 수수료가 1만 244원임을 제시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소요되는 실비를 현실화해 줄 것과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귀표를 조합에서 구입해야 하는 현 실정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관리수수료 책정단가를 지금 시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3개항을 건의했다.

### 생산기반·인프라 확충해야

개방시대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도입 등 시장차별화 대책과 생

산기반과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지난 6월 18일 한국마사회에서 개최한 개방대비 품목대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축산물에 수입산과 차별화를 갖고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는 “음식점원산지표시제를 쇠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외식문화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국내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 제도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선현 대한양돈협회 전무는 “분노처리비용의 증가, 사료비 급등, 질병악화 등 시장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전면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후계인력 공급 시스템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교육프로그램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찬 서울대학교 교수도 “경쟁력 있는 농가가 지속해서 축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농가들도 희생할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미 FTA 피해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분 지원해야

농협중앙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대책으로 실질적인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소득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금 확대, 수입관세 목적세화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6월 11일 화상회의실에서 각 시·도 축협운영협의회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조합장들로 구성된 축산발전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을 골자로 하는 농협 대책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협중앙회가 이날 밝힌 한·미 FTA타결에 따른 축산업경쟁력강화 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소득보전 직불금제'와 관련 현행제도와 달리 가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할 경우 소득차를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폐업 지원금 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도축세 폐지 등 세제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마 레저세를 인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축산물을 희생시켜 조성되는 축산물 수입관세를 축발기금에 납입토록하는 목적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축산농가의 소득세를 50%를 경감하고 농축산용 석유류를 영구 면세화 하는 한편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을 영구 적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축종별로는 한우의 경우 시설현대화와 쇠고기 생산이력추적 시스템 법제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과 품질향상을 위해 생육 운송차량 지원이 필요하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전국 한우경진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양돈은 소모성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와 개·보수를 추진하고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운영, 양돈조합을 중심으로 계열화사업체계 구축, 한국형 종돈 육성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낙농은 가공원료용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원유 수급안정을 위한 정보망 구축, 우유급식 확대, 유업체 시설현대화, 치즈전문조합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닭·오리산업은 포장유통 의무화사업 조기정착, 핵

심농가 시설현대화 지원, 전국 권역별 계란유통센터 현대화시설자금 지원, 산란계 농가 자온저장창고 설치자금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여성낙농인 심포지움 개최

경기도는 시장개방과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그리고 환경으로 인한 입지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낙농산업의 진정한 주인인 여성낙농인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현재의 낙농업 현실은 한미, 한·EU FTA 등 시장개방 압력,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 곡물가격에 의한 사료가격 인상, 그리고 환경문제로 인한 신규 입지제한 등 3중고로 인하여 울상을 짓고 있다.

이런 낙농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낙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기도에서는 낙농업의 실질적 경영자인 여성낙농인 150명을 대상으로 6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양평에 소재한 양평친환경농업교육원에서 '정보교류 및 신기술 습득을 통한 여성낙농인의 의식개혁'을 목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심포지움에는 충남대, 강원대, 낙농진흥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미션이벤트 등 각계각층의 국내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한미 FTA 타결이후 전망 및 낙농인의 자세, 원유 위생 안전관리, 젖소 유우군 능력검정, 위생적인 목장관리, 경기 농정시책방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현재의 어려움을 스스로 타개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통하여 농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자료출처 :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 라이브뉴스)